

데스크 시국



홍행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표발 같이 경쟁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광장에서 광주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아 광천동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첫 유세를 했으며, 국민의당도 광산구 수안동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승부 결정지를 호남 민심

‘민중 세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이 지역 표심은 언제나 주목받아 왔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선 ‘광주·전남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그야말로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호남 민심의 향배가 오는 3월 9일 대선의 결과를 결정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광주·전남에서 서서히 불기 시작하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도서정가제는 위탁판매 제도와 함께 출판 유통의 근간을 지탱하는 도서 판매 제도이다. 이는 국민에게 독서 활동을 통해 여러 장르의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상품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출판사와 서적상 그리고 독자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서적상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할인을 강제토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 가운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유일하게 서적뿐이다.

이와 같이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문화적 상품인 도서의 정가란 출판사가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 판매하는 독자의 구매 가격이다. 그러므로 책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형성되고 가격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자유가격 제도 하의 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이다. 다른 상품에는 일절 부여하지 않는 예외적 정가제 인정은 출판물이 여느 공산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으로 사유재이기에 앞서 공공재이며,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부재로 인한 폐해나 역

기고



황옥주 수필가

한양대 정민 교수의 ‘한시 이야기’를 읽느라 밤을 썼다. 두껍지도 않은, 250쪽 남짓한 책인데도 흐릿한 시력 때문에 읽고 나니 아찔이었다. 지은이는 한시를 읽으면서 사물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함께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한다.

이 책을 꼭 읽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4년쯤 전에 조양숙 씨의 ‘논어강설’을 읽을 때다. 송나라 휘종의 그림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민의 ‘한시 이야기’가 전거라 했다. 그사이 있고 있다가 ‘해원 신운복’ 화집을 넘겨 보면 중 생각이 떠올라 위대 주문한 것이다. ‘한시 이야기’는 한시와 관련된 스무 편의 이야기인데 각 편마다 화제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이다. ‘옛날부터 그림과 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시는 모양이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라는 말도 있었다’로 서두실 마리를 풀고 있다. 송나라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조광운은 나라를 일으키면서 ‘대신과 간관을 절대로 죽이지

사즉생의 각오만이...

는 ‘이재명 바람’이 남은 21일간 태풍으로 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상륙할 경우 현재의 박빙 구도가 무너지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MZ세대로 불리는 20대 초반~30대 중반 일부 유권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힘이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광주·전남의 ‘윤석열 바람’은 찬란 속 태풍을 넘어 ‘정권교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 대선 득표율이 최소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송갑석 위원장이 엿그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대선 득표율 목표치를 85%라고 밝힌 것이나, 민주당 전남선대위원장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남의 투표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이 가운데 90%의 득표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대선 득표율 목표치를 아예 25% 이상으로 올려 잡았다. 특히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송기석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호남 득표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광주선대위는 25%를 넘어 30% 득표율 목표에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목표 득표율 설정에 대해서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총괄선대위원장)의 본격 등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인한 친문 결집, 민주 세력의 분산으로서 전통적 지지 기반 결집 등

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세력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 내 2030청년 세대의 표심을 기반 삼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호남에서 25~30%라는 ‘꿈의 득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21일이나 남아 있다

현재와 같은 박빙 접전 구도에서는 호남의 한 표가 최소한 두 표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남은 21일간 여야는 ‘호남 표심 구애’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남은 기간 동안 두세 차례 광주·전남을 직접 찾아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호남 표심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에서 30%의 득표율을 쫓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겨우로 민주당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빛이난 각종 불협화음과 갈등, 후보 결정 이후에도 지속된 당내 구성원 간 불신과 마찰 그리고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전략상의 실책 등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노출되는 박빙 지지율을 만들어 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21일이나 남아 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바로 지금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지역민 앞에 간결한 진심을 내보여야만 살길이 열릴 것이다.

시대 상황 변화와 도서정가제

기능보다는 교육과 교양,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지난 2003년부터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모든 도서는 출판물 종류에 관계없이 출판사가 정한 정가의 10% 할인에 각종 경품이나 마일리지 제공 등 간접 할인 5%까지 적용, 최대 15%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위한 논의 때 마다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서적상 양측 간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적상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가제를 고수하려 한다면 온라인 서적상은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든 정가제를 파괴하려고 한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작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간접 15% 할인이라는 현재의 안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다.

먼저 3년마다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유지·완화·폐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에 강화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도서의 값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재평가 가능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단축시켜 출판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을 이용

토록 했으며 정가의 10% 이내의 가격만 할인 적용토록 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책값은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값을 올리는데 6개월을 단축하고, 지역 서점의 경우 마일리지 5% 제공이 삭제돼 5%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은 5% 더 비싸게 구입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역 서점 지원을 위한 근거로 서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서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어디에서나 균일한 가격으로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은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훨씬 많은 책을 판매하고 수출도 하고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이는 다양한 출판 활동과 합리적인 시장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출판사, 중간 서적상, 소비자 독자의 구매력에 맞는 정가 책정과 판매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출판계와 온오프라인 서적상의 의견을 만족시켜 주는 정답은 아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그림과 수필

말라”는 원칙을 세웠다. 새 왕조의 기틀을 받칠 주춧돌이다. 나라의 발전은 바른 정치와 왕의 신념에 달렸다. 연로가 살아야 문화적 황금시대도 열 수 있다. 송나라가 그랬다.

중국의 한시하면 당나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당송 8대가 중 당의 시인은 한유와 유충원 뿐이고, 여섯 분은 송나라 시인들이다. 그뿐 아니라 범종엄, 사마광, 포정전 같은 유능한 정치가들이 즐비하여 반석이 튼튼했다.

그러나 세월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영원은 없다. 휘종은 부왕 신종의 열한 번째의 왕자로 왕좌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문학과 그림을 즐기며 자유분방하게 자랐다. 어쩌다 18세에 황제가 되었으나 이미 부패해 버린 나라를 바로잡을 재목이 아니었다. 결국 금나라에 망해 이르러리 끌려다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비록 정치는 그르쳤어도 휘종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뛰어났다. 종종 궁중의 화공들을 모아 그림대회를 열고 그때마다 손수 화제(畫題)를 내렸다. 평범한 화제가 아니라 유명한 시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삼았다. 한 번은 ‘꽃을 밟고 돌아오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가 제목이었다. 꽃향기의 실존은 알지만 보지는 못한다. 이렇다 할 화공들도 당황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중 한 젊은이가 그림을 제출했다. 말 한 마리가 달려가는데 그 꿈무늬를 나비 떼가 뒤쫓아 가는 그림이다. 얼마나 재기 넘친 착상인가! 어느 날은 ‘어지러운 산이 옛 절을 감추었다’는 화제를 걸었다. 역시 생각을 강요하는 제목이다. 재주꾼들은 있

기 마련, 어느 화가는 어디에도 절은 없이 깊은 산속 작은 오솔길에 웬 스님 한 분이 물동이를 이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다. 가까운 곳에 절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것을 한시에서는 입상진(入象盡意)라 하며 ‘형상을 세워서 나타내려는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란다. 나비는 향을 쫓기 마련이고 절이 없는데 물동이인 스님이 산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수필도 그렇다. 보이는 것만 써진 글은 싱겁다. 상상을 다양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의 명문일 것이다.

일기는 초등학교도 쓴다. 사실과 생각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필은 아니다. 보고서가 아닌 이상 사실의 기록만으로는 곤란하다. 작가의 학문과 지식, 다양한 경험과 사고의 융합이 글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수필을 중년 이후의 글이니 하는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수필가는 많어도 수필로서 명작이 드문 것은 그만큼 수필이 어렵다는 말이다. 어떤 수필가는 수필을 “크게는 위대한 문호의 글, 작게는 깨끗한 문사의 글”이라 평하기도 했다. 표현이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이지만 이해는 간다. 수필은 “안개처럼 와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수법”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윤오영의 주장이다. 그런 유려(流麗)한 글이 안 되니까 재능 없는 나는 글쓰기가 두려운 거다. 수필을 쓰기 시작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삼십 년이 지나면 무엇 하리. 글마다 부끄럽다. 생각의 여백, 독자의 상상이 따리를 틀 그런 여백이 있는 글을 써 보고 싶다.

社說

공식 선거운동 시작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부터 유세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정계천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이라는 노랫말처럼 이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윤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구미에서, 심상정 후보는 전주에서 각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윤 후보는 ‘심판’을 내세웠다. 부산에서 서울로 ‘경부선 상행 유세’를 벌이고 있는 이 후보는 부산과 대구 유세 현장에서 ‘경제’를 34번이나 외치면서 ‘경제 대통령’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서 이 후보는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떤가.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떤가.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떤가”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구에서도 “진영과 지역을 가리

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겠다”며 “나를 위해, 대구를 위해,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경부선 하행 유세’를 벌이고 있는 윤 후보는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에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출정식 이름을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 했고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선에서도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정권을 또 맡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앞선 후보가 반드시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엇치락뒤치락 박빙 현상을 보이며 어느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 과연 누가 대권을 차지할 것인가.

뒷전으로 밀린 안전관리 되레 느는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조각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21톤 트럭이 전복되

면서 A(66)씨가 숨졌다. 이 사고는 울들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이다. 경찰은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풀려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역시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 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노동자 네 명이 숨지는 등 총 여덟 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천NCC 측은 열교환기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 과정에서 수압 테스트 대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공기압 테스트를 진행, 정부의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노

동자 여섯 명이 숨졌는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 수칙 위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울들이 현재까지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3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7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 업계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가 휴업에 들어가지도 했다.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사고와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 관리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제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사고와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 관리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제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이 올랐다. 박빙의 승부가 예견되는 만큼 대선 결과를 어느 누구도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으로 여론이 발끈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적폐 수사’는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용서했던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회고했다.

여권 내에서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 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는

며칠 전 염수정 추기경은 윤 후보와 환담한 자리에서 “보복으로 시작하면 보복으로 끝난다”라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보복

리가 있으면 법과 원칙의 상의 상당수 국민도 ‘정치 보복’으로 인한 노정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 통합’을 외쳐 온 대선 후보가 직접 ‘적폐 수사’를 언급해 국론 분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최고의 실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 수사한다는 건 당연히 한 이야기다. 특히 ‘특수 통감사’ 윤 후보에게는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정치 보복 역사의 한가운데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

통감사’ 윤 후보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제 검사사가 아닌 일국의 대통령 후보다. 다행히 뒤늦게 “시스템에 따라 잘못된 게 있으면 원칙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더 이상 ‘정치 보복’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냈던 ‘국민 통합’ 여부에 달려 있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책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